

이슈브리프 852호
(2026. 6.10)

북중 정상회담의 함의와 한반도 정세 전망

제852호

김보미 bomi@inss.re.kr
박병광 bkpark@inss.re.kr
임수호 shlim@inss.re.kr
최용환 yonghwan@inss.re.kr
홍석우 hkorea213@inss.re.kr



국문초록

2026년 6월 개최된 북중 정상회담은 북중관계가 전통적 우호관계를 넘어 새로운 전략적 협력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양국은 조중친선의 역사적 의미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사회주의 연대와 전략적 협력을 강조하였으며, 상대방의 핵심이익과 정치적 노선에 대한 상호 존중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와 두 국가론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견을 제기하지 않고 북한을 지역 정세를 함께 관리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대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는 사실상 의제에서 배제되었다. 북한은 정상회담 전후 핵시설과 미사일 생산시설을 공개하며 핵보유 의지를 재차 과시하였고, 중국 역시 북핵 문제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북핵 문제에 대해 보다 현실주의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정치·경제·사회·안보 분야 협력 확대와 군대 간 교류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여러 정황상 중국이 북한과의 본격적인 군사협력에 나설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북러 군사협력을 견제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북중 군사협력 가능성을 활용할 여지는 존재한다. 향후에는 두만강 하구 개발을 둘러싼 북중러 협력, 북중 경제협력 확대, 그리고 중국의 대미·대한 관계 관리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중국이 여전히 한반도 문제의 핵심 행위자임을 재확인한 계기로, 향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함에 있어 북중관계뿐 아니라 한중관계와 미중관계의 변화 역시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 김정은, 시진핑, 북중 정상회담, 북중 동맹,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

북중 정상회담이 2026년 6월 8일부터 9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 원조조약(이하 북중 동맹) 체결 65주년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9년에 이어 7년 만에 평양을 방문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직접 시진핑을 영접하였으며, 회담 첫날 밤에는 숙소까지 배웅하는 등 각별한 예우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은 귀국길에도 직접 환송에 나서는 등 전 일정을 함께 하며 북중관계의 긴밀함을 대내외에 과시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한 우호행사를 넘어 최근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속에서 북중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회담이 북한의 핵무력 강화, 북러 군사협력의 심화, 미중 전략 경쟁의 장기화라는 복잡한 국제정치 환경 속에서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그 함의가 적지 않다. 더욱이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공식화한 이후 처음 열린 북중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북한의 새로운 대남노선과 핵보유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기도 했다. 본 글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함의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북중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전망한다.

전통적 우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

북중관계는 오랫동안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 ‘피로 맺어진 우의’ 등의 수식어로 설명되어 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표현은 여전히 유효했다. 김정은과 시진핑 모두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건설의 필요성을 언급하기에 앞서 조중친선의 역사적 정당성과 특수성을 재확인하였으며 북중 친선을 상징하는 조중우의탑을 함께 참배하였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는 과거의 우호관계를 단순히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토대로 양국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드러났다. 9일 노동신문 역시 이번 북중 정상 회담이 조중친선을 과시하는 동시에, “당과 나라 사이의 전략적 협조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양국이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하되, 변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보다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협력관계로 북중관계를 격상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사회주의 이념적 연대가 강조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시진핑은 중국공산당과 조선노동당이 “맑스주의 집권당”이며, 두 나라가 “사회주의 길을 함께 걷는 동행자”라고 표현했다. 김정은 역시 북중관계가 공동의 사회주의 위업을 추구하는 특수 관계이며 “사회주의 국가 간 협력의 본보기”라고 평가하였다. 이는 과거의 혈맹과 혁명전통 중심의 관계를 넘어 사회주의 체제라는 공통분모를 더하여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 정상이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함께 방문한 점도 의미가 있다. 김정은은 북중 정상회담 불과 일주일 전인 6월 1일에 이곳을 찾아 창립 80주년 축하연설을 진행한 바 있다. 해당 학교는 2024년 신축 이전 과정에서 마르크스와 레닌의 대형 초상화를 설치한 사실이 외부의 주목을 받았는데,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공식화했던 북한이 다시 사회주의 이념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의 사회주의 정체성 강조와 이번 방문은 북중 양국이 사회주의 체제를 공유하는 정치적 동반자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향후에도 이러한 이념적 연대가 양국 관계의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할 것임을 시사한다.

상호 핵심이익 존중과 전략적 공감대의 확대

북중 정상회담은 직전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과 중러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은 미국·러시아·북한과의 연쇄 정상외교를 통해 자국의 외교적 영향력과 전략적 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여전히 중요한 행위자임을 과시하는 한편, 최근 급속히 밀착하고 있는 북러관계를 일정 부분 관리하려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중국은 북한을 단순한 전통적 우호국이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이 장기화되는 국제환경 속에서 협력해야 할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상대방의 핵심이익에 대한 존중을 관계 발전의 중요한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양국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공동의 입장을 강조할 때 빈번하게 사용해 왔던 ‘조선반도’ 또는 ‘한반도’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시진핑은 8일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서로가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데 대해 지지해줌으로써 두 나라의 정치적 안전을 확고히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북중 양국이 상대방의 핵심이익과 국내 정치적 노선을 상호 존중하고 지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언급된 ‘정치적 안전’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와 ‘하나의 중국’ 원칙의 수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통일을 더 이상 국가 목표로 추구하지 않고 남북을 별개의 국가로 규정하는 이른바 ‘두 국가론’과 연계하여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이 중국의 핵심이익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온 것처럼, 중국 역시 북한의 두 국가론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견을 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핵화 의제를 회피한 정상회담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와 관련한 양측 정상의 언급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북한은 정상회담 개최 이전부터 비핵화가 협의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실제로 시진핑의 평양 방문 예정이 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되기 전후 김정은은 연이은 군사행보를 통해 핵무력에 대한 북한의 자신감과 불포기 원칙을 재확인했다. 3일에는 신규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하였고, 4일에는 김주애와 함께 5천 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의 항해시험을 참관했으며, 6일에는 탄도미사일 생산공장을 방문하였다. 또한 7일 발표된 김여정 담화에서는 국방력과 주권 문제에 대해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임을 강조하며, 비핵화 요구에 대한 강한 거부 의사를 재차 확인하였다. 이는 역설적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중국의 입장과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북한의 이해가 미묘하게 어긋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이 북핵을 인정할 수 있다면 굳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핵 시위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중 정상회담 공동 발표와 관련 보도에서 북한 핵문제나 비핵화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단기에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인식하고 동 사안에 대한 논의 자체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중국이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고 핵 문제를 의도적으로 의제화하지 않은 것은, 결과론적이지만 북한의 핵보유 현실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하지만 시진핑의 노동신문 기고에서 유엔을 언급하며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강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이 유엔 제재의 현실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북핵을 용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중국의 북핵 문제에 대한 정책 기조가 과거보다 한층 현실주의적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북중 군사협력 가능성의 부상

이번 북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북중관계 발전에 대한 4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상호 신뢰의 기초 구축 △실질적 협력 수준 향상 △민심 소통의 유대 강화 △전략적 협력 내실 구축 등을 제안했다. 시진핑이 제시한 네 가지 방향은 향후 북중관계의 발전 방향을 보여준다. 우선 ‘상호 신뢰의 기초 구축’은 최근 북러 밀착 속에서도 북중 간 정치적 신뢰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질적 협력 수준 향상’은 경제·무역·농업 등 분야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으로 볼 수 있으며, ‘민심 소통의 유대 강화’는 양국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전통적 우호관계의 사회적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협력 내실 구축’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외교·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 공조를 더욱 심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전략적 협력 내실 구축’이다. 시진핑은 당과 정부뿐 아니라 군대 간 교류 확대를 명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북중 협력이 안보·군사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특히 그는 북중동맹 65주년을 계기로 “당과 정부, 군대들 사이에 여러 부문과 여러 급에서의 의사소통과 교류, 래왕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며, 북중 간 군사협력의 가능성을 암시하였다.

물론 이것이 북중간 본격적인 군사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향후 북중이 동맹조약의 상호원조 조항(2조)을 활성화할 것인지, 혹은 중러 연합훈련에 북한이 어떤 형식으로든 참여하는 등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응하는 형태의 안보공조를 시도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무엇보다 중국이 북한과 대규모 군사협력을 본격화할 전략적 유인은 제한적이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피력해왔고, 과도한 대북 군사협력이 역내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켜 미국과의 전략경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북중 군사협력 가능성을 열어두는 이유는 북러 군사협력을 일정 부분 견제하는 한편, 한미를 압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가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을 사실상 묵인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 심화로 나아간다면, 중국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시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여 한미의 경각심을 환기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이 여전히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행위자이자 북한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회담 과정에서 양국은 전통적 우호관계를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주의 연대와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였으며,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와 두 국가론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중국이 북중관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동시에 이번 정상회담을 이어지는 연이은 정상회담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도 있다. 예컨대 시진핑의 이번 방북이 2026년 첫 번째

해외방문이라는 점은 2025년 시진핑의 첫 해외방문이 한국이었다는 점과 연관시켜 보아야 한다. 작년 시진핑의 한국 방문이 APEC이라는 다자무대였다는 점은 차이가 있지만, 시진핑 3기 출범 이후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였다는 점은 북한으로서는 적지 않은 아쉬움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고, 북한을 지역 문제를 다루는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시킨 것은 한국의 입장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하지만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핵시위를 해야 할 만큼 중국의 북핵 인정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 이후 북중 간에는 다양한 영역과 층위에서의 교류와 협력 확대가 예상된다. 이 가운데 향후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부분은 첫째, 두만강 하구 개발과 관련된 북중러 협력 여부이다. 이번 회담에서 북중이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심도 있는 논의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동해 출해권에 대한 중국의 높은 관심과 이해를 고려할 때, 동 사안은 시간의 문제일 뿐 북중러의 공동 의제로 부상할 것이다. 북한이 중국에 가진 거의 유일한 정책적 레버리지를 양보할 것인지, 이 이슈를 통해 어떤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인지 등에 따라 북중러 협력의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중 경제협력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사안이다. 이번 정상회담 분위기를 고려할 때 북중 경제교류 확대는 거의 분명해 보인다. 다만, 중국이 대북제재를 명분으로 교류의 범위와 속도를 조정하려 하는지, 관광 등 제재의 직접 대상이 아닌 영역에서 집중하는지, 인적 교류는 얼마나 확대 되는지 등이 북중 경제협력의 내용을 좌우할 것이다. 셋째, 여전히 미중·한중관계 관리가 필요한 중국의 향후 행보도 주목된다. 세간의 해석처럼 중국이 북중관계 개선과 북중러 협력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면, 동북아의 냉전적 진영화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동 지역의 안보딜레마 심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냉전적 진영화 혹은 지정학적 교착상태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뿐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재확인되었다면, 한중관계 관리가 그 다음 과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